

與 “내란종식·정당해산심판”, 野 “친북 반미주의 정부 인사”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與 “내란 가담자 확실히 단죄해야”
정당해산심판 청구요건 묻기도

野 “李 정권 인사, 국익 걸림돌”
尹 체포영장 집행 CCTV 유출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가담자를 단죄해 완벽한 내란종식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人事)’가 국정 운영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도 계엄군에게 동료 의원을 팔아 넘기려 했던 내란 동조 세력이 버젓이 앉아 있다”며 “좌시할 수 없다.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변명만 늘어놓는 살아있는 시체에 불과한 주요 공작자들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로잡아야 한다. 내란에 가담한 이들을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질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걸음이 바로 완전한 내란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정 대표를 향해 막말을 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두고 “저는 송언석 원내대표, 원내대표에서 사직하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국민의힘이 정당해산심판 청구요건이 되는지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추후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엔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 두번째 주자로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의 중요성을 강

조하며 “이재명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국익에 최대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김민석) 총리는 1985년 서울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며 “저기 앉아 계시는 정청래 대표는 1989년 미 대사관 점거, 폭탄 투척, 방화 미수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저 때의 일을 지금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하고 있다”며 답변을 미뤘다.

임 의원은 “미국이 이런 사람들의 면

면을 보고 대한민국 정권을 판단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런 친북 반미주의자들이 딱하고 버티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미 협상이 가능할 리가 있겠나”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국익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많은 장관들로 구성됐던 윤석열 내각, 그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당시 CCTV (폐쇄회로) 영상 일부가 온라인상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정성호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긴 하지만 능멸하고 모욕하는 걸로 비취지는 이런 행태는 국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정말 부관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 CCTV 녹화를 열람했는데, 이 모습을 촬영한 듯한 영상이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걸 지적한 것이다. 정 장관은 해당 영상이 유출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정청래 “모든 문제 책임은 당대표에 있어”

與野 3대특검 합의에 당내 투톱 갈등
정청래 “더 철저하게 지휘·감독할 것
원팀·원보이스로 추 정부 뒷받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3대 특검 연장법안 여야 합의 파기로 불거진 자신과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 상황에 대해 “당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사태를 진화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만났다”며 “더 소통하고 더 화합하기로 했다. 더 찰떡같이 뭉치고 차돌같이 더 단단하게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내 투톱의 갈등 상황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종 책임이 당 대표에게 있기에 당무를 보다 더 철저하게 지휘하고 감독하고 체크하도록 하겠다”며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바로 즉시 바로잡겠다. 중요한 당 내 사항은 제가 직접 구체적으로 일일이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께서 여러가지로 마음고생도 심하고 힘든 며칠을 보내

신 것 같다”며 “우리 김 원내대표님, 위로드리고 더 힘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비공개 만찬 후 “당·정·대는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고 화합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동시에 당·정·대는 정국 현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엔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 함께 자리했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만찬 자리에서 서로 웃으며 손을 잡았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했고, 김 원내대표는 “부부나 형제는 다 싸우면서 친해지는 것”이라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부부싸움 안 하나”라고 화답했다. /박태홍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해수부 이전, 권력 장악 도구로만 보는 것”

장동혁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李 정부, 지방선거 위해 조속 추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두고 “부산 발전이나 균형 발전의 기회가 아니라 부산과 지방 행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부산과 지

역 균형 발전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 해수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어야 했다”며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해수부의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부산 지역 정치권에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차기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태홍 기자

법인세 신고기업 15% ‘깡통법인’… 청산 대책·지원 절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여파
경기둔화에 폐업 늘어나기도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0곳 중 15곳은 매출과 이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청산 대책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초선·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금리·고물가, 극심한 내수부진의 여파로 매출과 이익이 아예 없는 이른바 ‘깡통법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

8498곳 가운데 16만1761곳(15.3%)이 수입금액(매출)과 각 사업 연도소득(이익) 금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수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기업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없을 확률이 높아 깡통기업으로 불린다. 깡통기업은 2020년 11만3152곳이었는데, 지난해 16만1761곳으로 4년 사이 약 5만 곳이 증가했다.

깡통기업의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신고 법인은 83만8000개에서 105만8000개로 약 26% 증가했는데, 깡통기업은 11만3000개에서 16만1000개로 약 42% 증가했다. 이 동안 전

체 기업 중 깡통기업의 비율은 13.5%에서 15.3%로 늘어났다.

박성훈 의원은 급격한 경기 둔화로 직격탄을 맞은 깡통기업에 폐업이 늘어난다는 점을 주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1440 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85% 증가한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는 폐업 이후 제대로 청산조차 못하는 ‘무늬만 법인’을 위한 대책은 물론 폐업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성장 유도 정책과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李 대통령, 취임 104일만에 내각 인선 완료

국무위원·장관급 인사 8명에 임명장
공식되었던 교육부·여가부도 채워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위원, 장관급 인사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최고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이들은 최고진·

원민경 장관, 그리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역원 금융위원장 등 8명이다.

특히 공식이었던 교육부·여가부도 수장이 채워지면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은 대통령 취임 104일 만에 완료됐다. 두 부처는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가 낙마하면서 다른 부처보다 장관 임명이 늦어졌다. /서예진 기자 syj@